

제2장

남북회담의 진행



제1절 남북회담 추진현황

제2절 장관급회담

제3절 군사분야 회담

제4절 경제분야 회담

제5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제2장 남북회담의 진행

제1절 남북회담 추진현황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장관급 회담을 중심으로 경제, 군사, 체육, 적십자 등 여러 분야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2004년도에는 총 25회(연61일)의 회담을 개최하여 19건의 합의문건을 채택하였다.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대화는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해 나간다는 원칙에서 접근하였다.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2004년도에는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발전과 함께 군사분야에서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장관급회담에서 두 차례의 합의끝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분계선상 선전활동 중지 방안을 합의하고 시행하게 됨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초보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경협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조치도 강화하였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남북간 원활한 왕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도 청산결제합의서」를 채택하여 청산결제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개통 일정 등 주요 경협사업 추진을 협의하였으며, 민간기업 대북투자 상담 등 대북경협시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사회분야 회담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용천재난구호회담을 개최하여 재해복구에 필요한 긴급구호품과 복구용 자재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등을 협의하였다.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에서는 공동입장에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별도 협의체인 남북사회문화분과회의의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2004년도 남북회담은 전문화·실무화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또한 남북간 현안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인 협의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그러나 7월이후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남북당국간 회담도 중단되었다.

북한은 7월8일 김일성 10주기 민간 추모대표단의 방북이 무산된데 대해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7월 13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개최를 거부하였다. 또한, 7월 19일 예정되어 있던 「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에 따라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이어서 7월 21일 북한인권법의 미국 하원 통과, 7월 27일과 28일의 대규모 탈북자(468명) 입국 등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민감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북한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8.3~6)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8.31~9.3)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그러나 남북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남북경협, 민간급 사회문화교류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남북관계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는 달랐던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남북회담 개최현황 】

구 합	분 계	합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131	27	8	33	38	25
정상회담관련 (13)	남북정상회담	1	1				
	남북특사접촉	4	4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5	5				
	통신 보도 실무접촉	2	2				
	의전 경호 실무접촉	1	1				
장관급회담관련 (15)	장관급회담	14	4	2	2	4	2
	실무접촉	1			1		
군사분야 (31)	남북국방장관회담	1	1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10	3	2	3	2	
	남북군사실무접촉	10			6	4	
	군사통신실무자접촉	1			1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	2				2	
	장성급 군사회담	2					2
	장성급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3					3
	장성급 군사통신실무접촉	2					2
경제분야 (5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9	1		2	4	2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2	2				
	금강산관광활성화당국회담	2		1	1		
	철도 도로연결실무협의회	4			1	2	1
	남북철도 도로연결실무접촉	10			3	5	2
	임남댐 공동조사실무접촉	1			1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2			1		1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1			1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		1	1		1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1		1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4			2	1	1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1	
	청산결제실무협의	3				1	2
	청산결제거래위한 은행접촉	2					2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4			1	3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1					1
인도분야 (15)	남북적십자회담	5	2	1	1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6			2	3	1
	면회소건설추진단회의	3				3	
	용천재난구호회담	1					1
체육분야 (4)	아시아경기대회참가실무접촉	2			2		
	U대회참가실무접촉	1				1	
	아테네올림픽공동입장실무접촉	1					1
	남북특사회담(3)	3	1		1	1	

제2절 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부터 개최되어 총 14차례 개최되었다. 장관급회담은 남북간 제반 현안문제들을 협의, 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남북간 현안 문제 이외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성사시켜 경제분야와 군사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초보적 조치를 이루었다.

1.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3차 장관급회담은 제12차 회담(2003.10.14~17)에서 합의한대로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13차 회담에 참석한 북한측 대표단에 일부 교체가 있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 장관)	김령성(내각 책임참사)
대 표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오지철(문화관광부 차관)	신병철(내각참사)
	신언상(통일부 실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김준근(민경련 서기장)

제13차 회담은 2004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고위회담인 만큼 한 해의 남북관계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을 2004년도 남북이 함께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 구상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먼저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진행중인 경협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정치군사 분야의 신뢰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과제로 △3대 경협사업의 착실한 추진, △문화재 보존 및 고대사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운영, △이산가족상봉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을 본격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제13차 회담이 올해 남북관계의 전도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동결 대 보상」 제안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남과 북이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공동의 정신적 기둥으로 삼고, 쌍방 당국 간 공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며 남북경제협력을 당국이 책임지고 진척시켜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북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국호 영문표기(COREA)문제를 2004년중 UN에 남북이 공동으로 제의하는 문제,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전연지대 비난방송 중지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남북은 수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군사당국자 회담의 조기 개최, 제9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등에 합의하고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04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밖에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금년 상반기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
-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
- 제14차 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2.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3차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제13차 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이 북한의 무반응으로 개최되지 못했으며, 북한측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우리들의 정국불안을 이유로 회의장소 변경을 고집함에 따라 경제분야 실무회담들이 제때 열리지 못하고 몇 차례 연기되었다.

한편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4.22)에 대한 우리측의 신속한 지원과 북한측의 사

의표명은 회담 전망을 밝게 하였다.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14차 장관급회담은 당초 합의대로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으며, 북한측 단장이 권호웅 내각참사로 교체되었다.

우리측은 우선 제13차 회담에서 합의한 장성급군사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14차 회담에서는 개최 날짜를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제3차 6자회담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북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필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요한 추진 과제로서 △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한 협력방안, △질서있는 민간교류 지원문제,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운영문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조기

건설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우선적으로 중지되어야 하며, 이지스함의 동해배치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특히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측은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시작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의 즉각 중지 등 상대방을 향한 방송 중지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남북은 수 차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없이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측은 장성급군사회담이 장관급회담 소관 밖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측은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약속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측의 확고한 의사표명 없이는 다른 합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대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끝까지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거부함으로써 남북은 차기 장관급회담 일정만 합의하고 일단 회담을 종료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 대표단의 귀환 직전에 긴급회담을 제의하면서 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로써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고, 그 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공동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6월 20일경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하고,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해나가는 데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사항들을 계속 협의
- 제15차 장관급회담은 8월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제3절 군사분야 회담

제13차 장관급회담('04.2.3~6)에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하였으나, 북측이 우리측의 회담 개최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제14차 장관급회담('04.5.4~7)에서 다시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이 5월 26일 금강산에서 남북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제1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두 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과 한 차례의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서해상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방안과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 결과 6월 15일부터 서해에서 남북 함정간에 유선·무선 통신망 및 시각신호를 사용하였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호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가.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북한측은 5월 12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를 대남통지문을 통해 5월 26일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 되었다.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정화(국방부 해군준장)	안익산(인민무력부 소장)
대 표	임인수(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문성묵(국방부 대령)	김상남(인민무력부 대좌)
	정영도(국방부 대령)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배광복(통일부 과장)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우리측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남북 서해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경비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시각 신호 제정·활용, 불법 어로행위 단속활동 관련 정보 교환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매년 꽃게잡이철이 되면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꽃게잡이철이 시작되기 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을 우선 협의·조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입장 차이로 인해 1차 회담에서는 합의 도출이 어려운 만큼, 일단 쌍방이 제시한 방안을 검토한 후에 6월 3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제1차 회담의 합의에 따라 6월 3일~4일 설악산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이 각기 제시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4가지 충돌방지 조치에 대해 우선 합의하여 6월 15일부터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측과 차이를 보였으며, 1차 회담에서 제기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해서 일정과 대상 등을 구체화한 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서해상의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다시 언급하였으나, 우리측은 북방한계선은 현재 남북 쌍방 모두 지난 50여년간 준수해 온 해상 경계선임을 분명히 하고,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설득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측은 더 이상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다.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합의 후, 쌍방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 선전활동 중지 시기, 선전수단 제거 범위 및 일정, 제거결과에 대한 이견 해소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쌍방간 이견이 해소되고 문안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남과 북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키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지)

-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
 -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
 -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교환
 -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 측 지역에 통신연락소 설치
-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
 -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 1단계(6.16~6.30)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제0100호
 - 2단계(7. 1~7.20)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제0640호
 - 3단계(7.21~8.15)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제1292호
 - 상대방측의 선전수단 제거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
 - 어떠한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음.

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

6월 4일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동 합의서에 나타난 긴장완화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 다소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11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 서로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권용술(국방부 대령) 오남섭(국방부 대령)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통신수단 사전 시험운용, 불법 조업 선박 동향 정보교환 1일 1회 실시 등에 대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북한측이 제의한 통신시 감도상태 확인과 8월 12일 통신연락소간 시험통화 실시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하였다.

선전수단 제거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대측 지역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을 명기하자는 북한측의 제의를 수용하고, 북한측은 제거목록 사전교환 및 제거결과 확인을 위한 실무대표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수용하였다.

아울러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월중 통신실무자접촉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문제
 - 국제상선공통망(주 156.8MHz, 보조 156.6MHz)을 활용, 해당 해역에 일방의 함정이 두척 이상 있을 경우 지휘 함정들 사이에만 교신
 -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
 - 불법조업 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시간, 위치, 척수)를 1일 1회 교환
 - 8월12일 새로운 통신선로 연결 및 시험통화 실시
 - 6월 14일 통신수단별 운영시험 실시
-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 6월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
 - 제거대상의 범위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체제선전 및 상대측이 비방, 중상, 선동으로 인식하는 모든 확성기, 돌글씨, 입간판, 전광판, 전단, 선전그림, 선전구호 및 글 등을 포함
 - 단계별 제거완료 7일 이전에 제거대상 목록을 교환하여 제거 결과를 검증
 - 육안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의문시 통지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협의 조정
 -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최종확인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

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6월 14일 공용 통신망 및 기류·발광신호 시험 운용을 실시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전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모두 중지하고, 6월 16일부터 1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수단 제거 작업에 착수하였다.

부속합의서에서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1단계 제거작업을 확인하기 위해 6월 29일 파주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은 짧은 기간에 1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 수단 제거작업을 성실하게 진행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8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제거 대상과 제거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일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 5일 개성에서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개최하여 모두 해결하였으며, 7월 6일부터 2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2차 실무대표회담에서 우리측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통신실무자접촉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6월 25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연결 지점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통신실무자 접촉을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통신연락소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문제와 관련한 연락사항만을 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남북간 통행관련 연락업무 및 남북 관리구역내 작업과 관련한 연락사항도 함께 맡을 것을 주장하였다.

6월 29일 이루어진 제2차 접촉에서 북한측은 우리측 입장대로 기존의 현장 군사상황실간 통신선로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가 기능상 서로 분리된다는 점을 수용하였고, 우리측은 자재지원 등 통신선 연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제4절 경제분야 회담

2004년에도 정부는 당국간 경험 논의를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일관된 방침하에 남북 당국간 경제분야 회담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1월부터 제1차 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과 제1차 청산결제 실무협의를 시작되어 제8·9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2004년 상반기에만 총 13회의 남북 당국간 경제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측은 조문불허, 새터민 대량 입국 등을 이유로 남북 당국간 접촉에 응해오지 않아 2004년 8월 31일부터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무산되는 등 남북 회담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당국간 회담의 소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진행, 개성공단 시범단지 첫 제품 출시 등 남북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은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 평양)에서 구성·운영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0년 12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총 9차에 걸친 회담이 개최되어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전력협력 등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항들을 논의해 왔다.

경제분야 총괄 협의체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4년에도 제8차 회의와 제9차 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으나, 제10차 회의는 북한이 조문 불허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개최되지 못하였다.

가. 제8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개성공단건설 착공 및 철도·도로연결 문제 등 남북간 기 합의된 경제협력 현안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일정을 협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건설공업성 부상)
대 표	박흥렬(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호홍(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2004년 상반기안에 1만평 규모의 시범공단 부지를 조성하여 생산에 착수하고, 2004년 안에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하부구조 건설도 완료하자고 하였으나, 우리측은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토지임차료, 지장물철거보상비 등을 우선 합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상반기안으로 1만평 시범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내부 기반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전력·통신 등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6.15공동선언 발표 4주년을 기념하여 경의선 도로를 우선 개통하자고 제의한데 반해 북한측은 2004년안에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서해선 개성~문산 사이 철도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동·서해선 도

로포장을 상반기 안으로 끝내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우선 2004년도 내에 철도 시범운행을 진행 하되, 경의선·동해선 도로포장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임진강수해방지 사업의 4월 착수, 남북경협협약사무소 개설 등 7개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함으로써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개성공단 개발
 - 상반기안으로 1만평 시범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
 - 1단계 100만평 내부 기반시설 적극 추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입주
 -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
- 철도·도로 연결
 - 올해안에 경의선(개성-문산), 동해선(온정리-저진) 구간에서 철도시범운행 진행, 경의선·동해선 도로포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
 - 철도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계역사 설계 및 기자재 제공협력 문제 협의
- 금강산관광특구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협력
- 상반기 안으로 직거래 확대를 위한 경협협약사무소를 개성공단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운영, 민간차원의 경협활성화에 적극 협력
-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 4월부터 현지조사 착수
- 남북경제시찰단 북측 방문, 북측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나. 제9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제8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2004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제9차 회의는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3~4, 설악산)과 동시에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제9차 회의에서는 북한측 대표단 박성희(석탄공업성 부국장)가 윤선호(무역성 국장)로 교체되었다.

남과 북은 제8차 회의에 이어 제9차 회의에서도 개성공단 및 철도·도로 건설일정 등 구체적인 경협 추진일정에 합의하였다. 쌍방은 개성공단 통신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문산-개성전화국-공단통신센터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데 합의하고, 여전히 의견차이가 있는 세부적인 사안들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철도·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공사가 완료된 경의선 도로를 우선 개통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측은 동·서해선 동시추진·동시개통을 제안함에 따라 협의과정을 거쳐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2004년 10월에 개통하고, 철도는 2004년 10월 시범운행후 2005년말에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북한이 쌀 지원 문제를 공식 제기함에 따라 우리측은 같은 날 설악산에서 진행된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상 무력 충돌방지 방안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감안하여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남북경협협회사무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직거래 주선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현지 기술지도, 선적전 검수 등 민간경협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합의문 요지)

- 개성공단 건설
 - 시범단지 조성공사 완료,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 착수
 - 전력·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협조
- 철도·도로 개통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개통을 2005년에 동시 진행
 - 열차 시범운행은 2004년 10월경에 진행
 -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는 2004년 10월까지 개통
-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를 빠른 시일내에 채택·발효
- 기합의·가서명된 합의서 조속 발효절차 진행 및 후속조치 마련
-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2.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던 남북경제제도실무협의회 제4차회의에서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채택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이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채택을 위한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집중 협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호년(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이승섭(법무부 특수법령과장)	김춘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최정원(출입국사업국 처장)

우리측은 지구내 범질서 위반자에 대한 활동중지, 경고 및 범칙금 부과,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통보 및 강제송환을 주장하고, 조사기간 동안 대상자의

접견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엄중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등 남북간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형사주권에 따라 처리하되 엄중한 주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남과 북이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7차례의 접촉을 통해 북한측이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한 후 위반 내용을 남한측에 통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벌금, 남측 지역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며, 조사기간 동안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승인 기관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지구출입사업기관이 담당하자고 하였으나, 출입증명서가 비자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입증명서 발급기관인 지구관리기관이 연장승인을 담당함이 합리적이라는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여 남측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체류, 출입심사,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최종 합의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문 요지)

- 개성·금강산 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
- 지구에 8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도착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나 1년이상 거주시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개인 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며,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통보 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등 조치를 취하고, 남측은 송환된 인원을 처리한 후 결과를 북측에 통보하며, 피해보상에 협력
- 출입·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남과 북은 관련 문제들의 협의·해결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3.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가.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남과 북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웅희(통일부 교류총괄과장) 이성한(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정진대(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윤선호(무역성 국장) 진 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청산결제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품목과 품목별 한도에 대한 당국간 합의를 토대로 개별 기업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북한측은 당국의 책임하에 청산결제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청산결제 신용한도 및 이자율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당초 입장을 수정하여 신용한도를 15%로 하고, 이자율을 0.5%로 조정하였으나 이자율이 최소한 1%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과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연말 차액잔고 청산방식과 관련해서도 북한측이 상품결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우리측은 상품결제시 결제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차액잔고 처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북 양측은 쟁점사항들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차기 실무협약에서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 남북 양측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2004년 합의서와 「수출입은행과 무역은행사이의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안에 채택하기 함.
- 제3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

나.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남과 북은 2004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파주에서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웅희(통일부 교류총괄과장) 유복환(재정경제부 지역협력과장) 김경원(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윤선호(무역성 국장) 진 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북한측은 회담초반 청산결제 거래방식, 이자율, 연말차액잔고 청산 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연말차액잔고 청산방식이었다. 상호 의견접근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북한측이 상품결제방식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우리측은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물자반출 또는 미달러화 중 상환측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정제의 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타결되었다.

또한, 대상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서로 희망하는 반입·반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측이 품목선정시 수량한도까지 결정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난항이 계속되었다. 결국 북한은 개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쌍방은 대상

품목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고,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2004년도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합의서 요지)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이 합의서의 부록1과 2의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기업들간에 계약의 방식으로 진행
 - 당국이 정한 경제단체가 청산결제 거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상호 통지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기간 : 2004년도 2/4분기중 합의되는 시기~12월31일
- 청산결제한도 : 미화 3천만 달러 범위내
- 신용한도 : 청산결제한도의 15%, 이자율 : 연 1%
- 청산결제 대상품목 : 남북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위탁가공 교역은 제외)
- 2004년도 청산결제 대상품목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협의·확정하고 이 합의서의 부록 1, 2로 첨부
-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 이 밖에 은행업무 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
- 2004년도 청산결제 차액잔고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또는 미달러화 중 상환측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청산하며 2004년 4/4분기내에 「남북사이의 청산결제 이행을 위한 2005년도 합의서」 체결
- 남과 북은 적절한 시기에 쌍방이 정한 장소에서 남북 기업들이 이 합의서의 대상품목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

다. 남북청산결제 관련 은행간 실무접촉

남과 북은 남북청산결제 관련 거래은행간 제1차 실무접촉을 2004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고, 제2차 실무접촉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천헌철(한국수출입은행 부부장) 박유환(한국수출입은행 부부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오성철(조선무역은행 실무자)

은행간 협의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은행명칭 문제,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북한측은 합의서 명칭과 전문 서명란에 들어 있는 은행 명칭에서 각기 ‘한국’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분을 삭제하고, ‘수출입은행’, ‘무역은행’ 으로서 명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자 계산 방법과 관련해서도 우리측이 복리계산과 지연 배상금을 1%를 제시한 데 대해 북한측은 단리계산을 요구하였다.

남북은 서로 입장을 양보하여 합의서 제목 등에서 은행간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이자 계산에서도 지연 배상금 없이 단리계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도 남북은 청산결제대상, 결제기간, 결제통화, 대금지급절차 등에 대해 합의하고 「청산결제 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가서명하였다.

(합의서 요지)

- 청산결제대상 : 남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매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의 결제대금(대상품목 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 대금 포함)
- 청산결제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2004년도는 합의서 발효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청산결제통화 : 계정 기장 및 차액잔고 지급 등의 통화 미달러화(US\$)
- 계정의 개설 : 남북청산결제은행은 각각 상대방 은행 이름의 계정(청산계정 및 이자계정)을 자기은행에 개설, 반출입대금과 이자를 기장
- 신용한도 : 남북 당국간 합의하여 정한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 해당 금액(2004년도 신용한도는 3,000만달러의 15% 이내인 미화 450만달러 이내)
- 대금지급 및 기장절차
 - 대금지급 절차
 - ①반출대금 청구 : 반출자 ➡ 반출자 청산결제은행
 - ②반출서류 송부 : 반출자(청산결제은행) ➡ 반입자(청산결제은행)
 - ③대기통지서 통지 : 반입자(청산결제은행) ➡ 반출자(청산결제은행)
 - ④반출대금 지급 : 반출자 청산결제은행 ➡ 반출자
 - 청산계정 기장 절차
 - 반출대금 지급일에 반입자 청산결제은행은 상대방 은행계정에 대기하고, 반출자 청산결제은행은 상대방 은행계정에 차기
 - * 대기 : 상대방 은행의 채권임을 기장
 - 차기 : 상대방 은행의 채무임을 기장
- 이 자
 - 이자계산 및 지급
 - 각각의 청산계정 기장금액에 대해 기장일로부터 실제 이자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계산
 - 실제이자 지급할 이자가 많은 은행이 이자계정의 잔고만 상대 은행에 지급
 - 이자율 : 연 1%

○ 청 산

-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달러화 또는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로 청산
 -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청산방식이란 차액잔고 상환측의 기업이 상대측 기업과의 개별 계약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에 따라 차액잔고에 해당하는 물자를 반출하면, 상대측 청산결제은행이 반입물자에 대한 대금을 반입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차액잔고와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
- 다음해 청산결제업무는 전년도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를 청산한 후에 시행

○ 코레스협정 체결

-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을 합의서 서명 후 체결

○ 통지·송부

-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 은행 업무 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도 이용

4.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전력·통신 공급문제와 통신·통관·검역 부속합의서 채택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4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흥렬(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최현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성수(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이상훈(정보통신부 협력기획과)	김인철(체신성 전기통신국장) 박성일(세관총국 심의원) 최정남(중앙위생검역소 소장) 전승주(체신성 과장)

개성공단 통신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남측 사업자가 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측이 운영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합작방식을 주장하면서 통신망 연결은 개성전화국에 전송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반면 우리측은 통신은 남측의 지정사업자가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합의사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단내 통신망은 우리측 사업자가 단독 설치·운영하되, 북한측 구간(MDL-개성전화국-공단경계)은 우리측 설계·기술지원 조건으로 북한측이 시공·유지·보수를 책임지며 필요시 우리측 기술진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단과 남측 지역간 통신망은 개성전화국의 전송장비를 경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측은 통신사업의 정치·군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계속 공단내 통신사업 참여를 주장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관·검역 부속합의서 채택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기 합의된 기본합의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쌍방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전력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우리측 사업자가 직접 설계·시공·운영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고, 건설·유지보수 인원의 출입보장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용수공급을 위한 월고저수지-개성공단간 송수관 건설에 필요한 우리측의 자재·장비 제공, 북한측의 폐기물처리장 무상제공 등에 합의하였으나, 통신문제와 부속합의서 채택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2004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진행
- 쌍방은 개성공단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나가기 위해 전력·통신·용수 및 폐기물 처리와 통관·검역 합의서 이행 등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 쌍방은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추후 실무접촉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함.

5.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가.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남과 북은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동 접촉에서는 동·서해선 도로 포장 문제와 철도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착수 문제, 분계역사 건설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 표	문대근(통일부 경험지원과장)	최진택(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우선 북한측이 동·서해선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아스팔트 등 도로 포장재를 신속히 제공해 줄 것과 우기 전에 북강·남강 교량 상판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측의 남·북·러 ‘TKR-TSR 사업 공동연구를 위한 3자 철도 전문가 회의’에 대한 참가요구에 북측은 회의 자체는 환영하나, 북한 철도 현대화 비용 및 북한철도 실태 조사 문제는 회담의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이 분계역사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을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은 동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만큼 검토한 후 경추위 제8차회의에서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역사건축 문제 이외의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3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완공을 위하여 도로 포장용 자재·장비를 3월부터, 동해선 교량상판을 5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자재·장비의 수리·정비 및 아스팔트 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
 - 제8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동해선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
 -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은 경의선은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동해선은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
 - 동해선 암반제거용 자재제공이 끝나는데 따라 2일간 자재 사용현장 방문 진행
- 차량운행사무소 설치·운영 문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남북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4차회의에서 합의

나.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남과 북은 2004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당초 북한측이 3월 24일부터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세부일정 협의중 우리측의 독수리합동군사훈련과 한미 전시증원훈련을 이유로 4월초로 연기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 표	문대근(통일부 경험지원과장) 유복환(재정경제부 지역협력과장)	최진택(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동 회의에서는 북한측 분계역사건축 관련 기자재 제공 문제와 열차운행합의서 채택, 차량운행사무소 개설·운영 등 남북간 철도·도로 개통에 필요한 제도적 문

제들을 논의하였다.

분계역사건축과 관련하여 판문역·손하역(경의선), 감호역·삼일포역(동해선)은 신설하고, 개성역과 금강산역은 보수하기로 하고, 우리측이 철도개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자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빠른 시일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약식으로 개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측은 이를 추후 통검·세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남북은 자재장비 기술지원 일정 등 총 6개항을 담은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 철도 개통에 필요한 분계역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문제들을 적극 협력
 - 설계대상은 판문역·손하역(경의선), 감호역·삼일포역(동해선)은 신설, 개성역과 금강산역은 보수로 하며,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
 - 이와 관련 북측은 관련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편의 보장
- 분계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
 - 현장조사와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합의서 부록에 따름
- 「남북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 빠른 시일안에 교환, 발효
-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약식으로 설치·운영
-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은 다음과 같이 진행
 -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용 설비들의 정상운행을 위한 기술지원 : 4월말부터 각각 2~3명씩 체류하는 방식으로 진행
 - 고장장비 수리·정비를 위한 제9차 기술지원 : 경의선 5.28~6.6, 동해선 5.13~5.22
-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결정

(합의서 부록 요지)

-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는 경의선은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동해선은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
 - 추가 현장조사는 쌍방 합의에 따라 실시
- 현장조사 구간은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을 포함한 남북철도 연결구간으로 하며, 현장조사시 조사대상은 분계역사 설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진행
 - 현장조사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
- 남측 현장조사 인원은 단장과 설계전문가를 포함하여 9~10명으로 하며 분계역사 등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 일정과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문서교환 방식 등을 통해 협의·결정
- 북측은 남측 현장조사와 기술지원을 위한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 보장

다.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남과 북은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미리 전달한 역사건축 설계도면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면서 8월초에는 동·서해선 역사 기초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8월초 추가적인 기술협의를 통해 기초도면을 북한측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만, 북한측이 요구한 자재장비중 철도·도로 개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용 물자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쌍방은 중앙분리대 등 추가 자재제공에 따른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조정하기로 하고, 총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 경의선·동해선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계획설계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말까지 건축실시설계 완료
 - 남측은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 기초공사를 위해 필요한 기초도면을 8월 초순 북측에 제공
 - 쌍방은 분계역사 등의 건축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건축시공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확정
- 남측은 10월 중 도로 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자재 제공과 관련한 편의 보장
-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 ① 분계역사 등 건축 관련 : 8월 초순부터, 경의선·동해선 각각 7명 정도
 - ② 신호·통신·전력계통 시공 관련
 - 7월 하순부터(자재·장비 설치와 시공 부분), 경의선·동해선 각각 7명
 - ③ 제공장비의 수리·정비 관련
 - 제10차 : 경의선 7.28~8. 6, 동해선 7.13~7.22
 - 제11차 : 경의선 8.26~9. 4, 동해선 8.12~8.21, 각각 7명 정도
-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 본합의서 부록
 - 삽(6,500개), 곡괭이(1,500개), 가로등(570주), 중앙분리대(5km), 업무용차량(2대) 등 추가 제공
 - 유제혼합기(2대), 금망(510㎡), 철근망(220㎡), 아스팔트(200톤) 삭감
- 차기 회의는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결정

6.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남과 북은 2004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후속조치로 단독조사 항목, 북측의 사전자료 제공목록, 우리측의 현지 조사용 기자재 제공 목록,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관련한 통보체계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병철(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대 표	심용창(통일부 회담2과장) 심완섭(총리실 과장)	전병환(국토환경보호성 처장) 최태룡(기상수문국 책임부원)

단독조사 항목과 관련하여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방야계 공사 및 댐 신축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하고, 댐 신축 등은 홍수예방을 위한 최후의 협력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을 제외한 산림실태 및 하천실태 조사항목에 합의하였다.

기자재 부분에서도 북한측은 댐 신축 등에 필요한 조사용 시추차, 지반탐사기구를 요구하였으나 댐 신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사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기자재임을 이유로 조정하였다.

기상·수문 등 사전자료에 대해서도 기존 관측소 현황과 위치, 기상·수문 관측자료뿐만 아니라 기존 및 건설 중인 댐 등 수리시설 현황을 우리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상·수문망 형성 및 통보체계는 우리측의 위성방식 주장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우리측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단독조사항목과 세부조사내용 및 조사용기자재 제공목록, 북측의 기상·수문 등 자료제공 항목에 합의하고 이를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부록으로 첨부
- 쌍방이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 환방식으로 결정

7.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남과 북은 2003년 11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전화통지문을 통해 일정을 협의, 제4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2004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상호(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배광복(통일부 과장) 김병호(국무총리실 과장)	최정남(육해운성 책임부원)

북한측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주장하면서 부속합의서의 협의에 앞서 해운합의서를 서명·교환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남북간 선박운항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어야 해운합의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발효절차를 동시에 진행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측이 우리측 입장에 동의함에 따라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해상항로대 설정, 통신보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다.

북한측은 해상항로대 설정과 관련 우리측이 제시한 항로대(안)보다 영해쪽으로 근접한 항로대를 제시하면서 북측 항구에서 정박중 직접통신은 ‘빠른 시일내’에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경제성과 안전성 및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해상항로대(안)를 마련했음을 설명하고, 통신문제는 안정적인 선박운항의 본질적인 요소인 만큼 부속합의서가 발효되기 전에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우리측이 제시한 해상항로대(안)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북한측 항구에서 정박중 통신이 빠른 시일내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쟁점사항을 타결하였다.

쌍방은 기본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부속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최종 확정·채택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해운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부속합의서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음.
- 쌍방은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 채택하기로 하였음.
-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음.

이후 남과 북은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문안조정을 완료하고 5월 28일 최종 합의된 「부속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중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정식 서명절차를 완료하였다.

제5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2004년도에 남과 북은 용천재난구호회담을 비롯하여 3차례의 사회문화분야 회담을 개최하였다. 2004년 4월 22일 용천지역에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정부는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대북 긴급구호체계 가동을 위한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우리측은 4월 24일 용천지역의 재난피해에 대해 북한측에 위로의 뜻과 함께 지원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한측은 개성에서 4월 27일 긴급구호물자 전달 및 피해복구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로써 남과 북은 지난 1984년 서울과 경기일원에 내린 폭우피해를 계기로 개최된 남북적십자간의 수해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실무접촉 이후 20년만에 구호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남과 북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계기로 개·폐회식 공동 입장을 위한 실무회담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1. 용천재난구호회담

용천재난구호회담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4월 27일 하루동안 개최되었다. 회담에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과장급이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도 지원단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용천재난 구호회담에 참가한 남북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홍재형(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최성익(내각참사)
대 표	김한주(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 한창섭(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삼(국가계획위원회 책임참사) 황 철(내각과장)

회담에서 우리측은 긴급구호품과 의료품 전달계획을 북한측에 설명하였으며, 응급 의료진의 피해지역 파견 및 시설복구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 지원의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용천지역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자재·장비 명세(시멘트, 샤프, 불도저, 포크레인 등 자재장비와 유류·식량)를 우리측에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회담을 통해 북한측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파악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협의에 임한만큼 별도의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우리측은 회담종료후 5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긴급구호물자와 시설복구를 위한 자재장비 등 총 419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2.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우리측은 2004년 5월 14일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5월 17일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한적 총재 평양 방문시(4.20~24) 협의하였던 인도적 지원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5월 21일부터 금강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한적 총재 평양 방문시 북한 적십자회는 평양적십자병원의 현대화 지원과 의약품 지원,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었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접촉 일자를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측이 동의해옴에 따라 제4차 적십자실무 접촉이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은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별보좌역)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한측은 최성익(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별보)	최성익(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 표	유종렬(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위원) 유광수(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위원)	김경애(북한의학협회 부부장) 황 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우리측은 적십자 접촉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일자를 제시하고,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생사주소 확인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일자는 우리측이 전화통지문에서 제의한 대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로 하고, 설·6.15·추석 등을 계기로 쌍방이 각기 300명씩의 명단을 교환해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6.15를 계기로 우리측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100명의 명단도 함께 전달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10차 이산가족 상봉과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문제, 한적 총재 방북시 협의하였던 식량 지원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제10차 이산가족상봉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고,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문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우선 내시경 및 초음파 장비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인도적 지원문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북한측이 인도적 지원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2004년 5월 25일 수석대표 접촉과 전체회의를 각각 한차례씩 더 가

지고 쌍방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이 제4차 적십자실 무접촉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인식하면서 구체적 실시방안을 제시한 반면, 북한측은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등 인도적 지원문제에 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2가지 사안을 포괄하는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쌍방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제10차 이산가족상봉 일자 등 절차문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3.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04년 1월 30일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아테네 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과 체육교류 협의 등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제13차 장관급회담(2004.2.3~2.6, 서울)에서 남북은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 원칙에 구두 합의하였으며, 그리스에서 개최된 국가올림픽 위원회연합회(ANOC)총회에서는 남북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만나,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2.25, 아테네)

실무회담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박양천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를 수석대표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을 베이징 실무회담에 파견하였고, 북한측은 조상남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양천(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조상남(조선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
대 표	김승곤(대한올림픽위원회 사무차장) 정기영(대한올림픽위원회 국제부장)	윤용복(조선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박일남(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

우리측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전례에 따라 공동입장안을 먼저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선수단 호칭은 KOREA(코리아)로 하며 깃발은 한반도기, 선수단가는 아리랑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선수단 복장으로는 남자 상의는 청색, 하의는 베이지색, 여자 상의는 적색, 하의는 베이지색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번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과는 별도로 2008년에 있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협의를 위해 9월 중에 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체육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공동입장 문제가 이미 전례가 많이 쌓여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측의 제안에 큰 이견이 없이 동의해 왔다. 단,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논의를 위한 체육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으며, 대신 아테네올림픽 기간 중 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남과 북은 공동입장 실무문제에 관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선수단 호칭 : 우리말로 '코리아', 영어로 'KOREA'
2. 선수단 단기 :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은 한반도기
3. 공동입장시 음악 : 시드니올림픽때 사용한 아리랑
4. 공동입장 순서 : ①선수단 표지판 ②단기 ③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④남북 선수단
장 ⑤남북 임원 ⑥남북 선수의 순서
5. 선수단 복장 : 남자 상의는 청색, 하의는 베이지색, 여자상의는 적색, 하의는 베이지색